

‘주민소환제’ 25일부터 본격 시행

지자체장·의원 책임 묻는다

참정권 강화... 주민투표로 미리 지자체장 등 직위 박탈 가능

비리에 연루됐거나 무능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소환제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등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위해서는 광역시장·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 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청구를 못하도록 청구기간에 제한을 두었다.

동원 ‘조폭’ 등 9명 추가 입건

‘알바 피해자’ 30만~50만원 받아...24명 이상 사법처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3개과 조폭력배 등 9명 이상을 추가로 입건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조폭동원 의혹을 수사한 결과 한화 김모씨 비서실장이 한화계열사 김모 감사와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에게 연락했고, 김 감사는 범서방과 행동대장 오씨를 통해 대학로과 3명을, 김 사장은 고흥과 조직원 2명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회장은 전날 오후 9시에 가족이 보고싶다며 화상편화를 요청, 9시30분부터 20분간 컴퓨터 화면으로 자택에 있는 아내와 첫째, 둘째, 딸과 만났다.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D-1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 연결 시험운행을 이틀 앞둔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역에 한반도기와 ‘또 만나다’라는 인사말이 적힌 깃발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8·15 이전 정상회담 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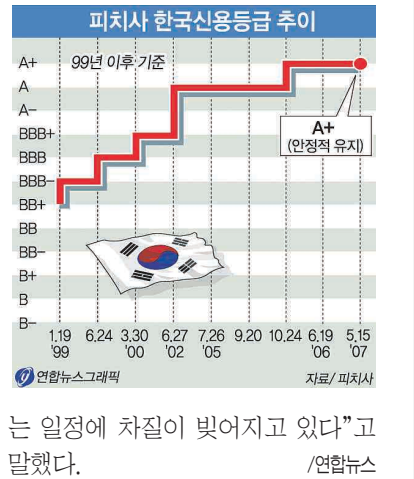
DJ, 獨 托론회서 남북정상회담 제도화 촉구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한 간 정상이 만나 방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하지 못하고 물러나면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대해 많은 점수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치, 한국 신용등급 ‘A+’ 유지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국가 신용등급으로 ‘A+’(안정적)를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과 시각

결의대회 만으로 안된다



김주정 사회1부 차장

광주시내 곳곳에서 요즘 때인 ‘결의대회’와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다.

서구는 지난 3월8일 서구청 광장에서 1천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한 이래 최근까지 11차례나 질서 지키기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4월 말 현재 주차단속(10만2천861건)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나 불법 쓰레기 단속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구청장들까지 나서 결의대회를 하고 캠페인을 벌여 시민의식에 호소하고 있지만 전혀 ‘야발’이 서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jjnews@kwangju.co.kr

Jeju Island Travel Advertisement for Jeju Mujeongwan. Includes package prices like '2박3일 78,000원' and '2박3일 169,000원'. Contact: 064-744-1109.

Cell Banking Advertisement. Features a large red heart logo with 'Cell Banking' text. Promotes services for cancer patients and provides branch information across various cities.